

부산항만公 “공공이 주도하는 ‘북항재개발’ 완수할 것”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사업 표류
개정안 발의 맞춰 사업모델 제시
주거 위주 벗어난 복합문화지구로
총괄 건축가 위원회서 의견 수렴도

부산항만공사(BPA·사장 송상근)가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도맡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단계 토지 조성을 마쳤으나 민간 대상의 공모를 거쳐야 하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또 그마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사업 전반을 주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간 부산 동구·중구 일대에서 추진돼 온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는 공공기관이 상업 및 문화시설 등을 직접 분양·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BPA 등은 달리 손 쓸 방도가 없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미래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BPA는 공사가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양수산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국민의힘 조정대(사하을), 광규택(부산 서·동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했고, 공사는 이에 발맞춰 이르면 다음 달 중 사업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구체적 사업성 확보 방안 및 도입시설 구성안도 선보인다.

송상근 BPA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북항재개

발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양도시 재개발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아레나·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조만간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부문 전문가로 꾸려질 ‘총괄 건축가 위원회’를 발족해 지역 의견도 차근차근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북항 내 일부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데 공사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항재개발 구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의 경우, 완공 시 부산역 연결 보행데크와 3.3m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 조망권 및 보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BPA는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사가 설계 중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크게 1,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양관광·레저·문화 등 상부 콘텐츠 도입 시설을 구상해 재개발사업의 초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양레포즈 컴플렉스, 복합문화공간 대체시설(전시관), 해양기관클러스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항 마린나 시설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한다.

2단계에선 항만 철도 원도심 통합 개발을 통해 부산항을 국제교류, 비즈니스, 금융, R&D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관광거점 도약을 목표로, 부산항 크루스터미널 이용객 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한일 간 여객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운영환경 개선 및 선사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지방 취업청년에 인센티브 최대 720만원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지방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2년간 지원
지방 산단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

정부가 청년 고용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무 인센티브를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기존 I·II유형을 폐지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단

순화한 뒤,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업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장려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수도권 유형

포함)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 근무 인센티브는 2025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장 호응이 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직장 생활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부발전, 中 中 中 에너지전환·해외진출 속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앞두고
中 中 中 실질적 협업 모델 구체화

한국중부발전이 중소기업과 손잡고 에너지 전환과 해외 동반진출에 속도를 낸다.

중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해외동반진출 협의회(해동진) 회장단과 함께 2026년 신년하례회 및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중부발전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38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해상풍력, 양수발전 등 미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소기업과의

실질적 협업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애 첫 수출(수출면장 확보)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중부발전이 해외 사업장의 예비품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협력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초기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부발전과 해동진은 오는 3월 인도네시아 짜레본 시장개척단 파견을 시작으로 베트남 기술교류회, 두바이 WET EX 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혀겠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탄소감축 함께하는 대·중견·중소기업에 최대 50억 지원

산업부 ‘탄소 공급망 파트너십’ 추진
오는 3월 6일까지 참여 컨소시엄 모집

정부가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탄소를 감축하면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탄소 공급망 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참여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걸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5억원 규모다.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관기업이 돼 복수의 중소·중견 협력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있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제품별 탄소발자국 관리가 강화되면서 최종재 생산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배터리 규정(EUBR) 등 공급망 기반 탄소 규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주관기업인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억4400만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뒀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본격 확산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컨소시엄당 지원금은 기존 최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40%에서 60%,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컨설팅 비용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美 계란 수입… “조류독감·명절물가 대응”

aT, 오는 27일까지 224만개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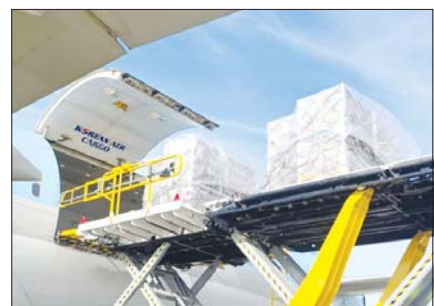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최근 국내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이 미국산 계란을 들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1항차 물량이 지난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25일 aT에 따르면 이번 미국산 계란 수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농식품부가 신선란 224만개 수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보름여 만에 진행됐다.

aT가 이행하는 초도물량 112만 개는 미국 농무부가 검증한 미국산 백색란 A등급 L사이즈(56.7g 이상) 계란이다. 오는 27일까지 총 224만개를 모두 인수할 계획이다.

도착한 계란은 국내 지정 국제공인검정회사를 통해 엄격한 검정을 실시하고,



미국 현지 국내에 들여와 신선란이 대한항공 화물기에 실리고 있다.

/aT

보관 온도 조건을 기존 4~12℃에서 0~10℃로 강화한다. 또 한글 표시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전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후 설 명절 전까지 주요 유통업체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와 aT는 향후 국내의 조류AI 확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계란 수입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